

〈발표4〉

생태주의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비판적 고찰

정지웅(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I. 생태주의 관점에서 복지국가 검토의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주의의 가치와 이념에 비추어 현대 복지국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 보고, 이를 토대로 생태주의에 적합한 복지국가의 발전 방향을 탐색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현대 복지국가가 출현하게 된 계기와 그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주요이론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비복지(dis-welfare)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복지국가가 출현하였음을 이야기한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복지국가는 태생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는 상호간의 도움 없이는 경영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Offe, 1984).

따라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작업의 과정은, 첫째, 생태주의의 가치와 철학에 위배되는 자본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둘째,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복지에 대해 복지국가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고찰하며, 셋째, 이러한 대응은 다시, 생태주의적 관점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판적 고찰 이후, 생태복지(ecowelfare)의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최근 시행되거나 제시되고 있는 생태운동의 몇 가지 전략들을 살펴본 후, 이것들의 사회복지적 함의까지 알아보려고 한다.

II.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와 복지국가의 한계

1.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생태위기와 공동체해체

생태주의의 근원은 근현대의 서구에서 주류(主流)를 형성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의 작동이 사회의 나머지 부분에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정지어버리는 '경제결정론'적인 시스템이었다(Polany, 1945). 이는 어떠한 행위에 '비경제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것은 존재할 권리를 의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강하게 부정되고,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모두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는 시대(Schumacher, 1973)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성장, 거대화, 대량소비, 대량생산이 지고(至高)의 가치로 설정된 근대 이후의 산업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생태계의 순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실시하였다. 이는 곧 생태계의 자정능력, 재생능력을 붕괴시켜 생태학적 위기를 가져왔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의 경제지상주의적 성격은 전통적인 지역공동체의 해체 현상을 야기하였다.

전통적인 지역사회 공동체의 해체는 노동력의 유입, 개인과 가계 소비수준의 증가, 유동인구의 증가, 개인주의의 확산을 요구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발달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자 귀결이었다(Ife, 2002). 경제지상주의가 추구하는 생산성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분업이 고도화되어 사람들이 매우 전문화된 좁은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쓰게 되면, 각 개인들은 생산과 소비가 완전히 분리된 처지에 놓이게 된다(박승희, 2005). 이렇게 정교화된 분업으로 구조화된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 개인과 가족은 임금노동에 의존해 살 수 밖에 없다. 생산력을 잃은 개인과 가족은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지 않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를 유지하는 길이다. 사회복지의 중요한 문제인 빈곤은 단순히 부와 소득의 부족 혹은 결핍의 문제라기보다는, 최첨단 분업의 사회 속에서 생산력과 생산기능을 상실한 개인과 가족이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한동우, 2007).

지역사회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연대의식(連帶意識)의 약화다. 전통사회에서는 이웃공동체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 대개 이런 사회에서는 누대(累代)에 걸쳐 거의 같은 장소에 살아가며 교분을 맺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박승희, 2005). 하지만 산업화의 발전으로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낯선 사람들과 익명(匿名)적인 접촉을 계속하게 된다. 개인들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 군중 속의 소외를 경험하고, 공동체 해체현상에서 파생된 각종 사회문제는 국가의 복지제도를 통한 개입의 필요성을 높이게 된다(최종혁, 2004).

2. 복지국가의 한계

사회복지학은 그 동안, 개인의 욕구(needs)를 충족시키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사업서비스를 통해 한 개인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이며,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의 위험과 빈곤의 가능성을 지속시키거나 증가시켰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가 아닐 것이다(한동우, 2007). 이런 관점에서 현대의 복지국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을 파생시키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야기한 문제들에 사후(事後)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사후적 대응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위험요소를 봉합하여, 추후에 또 다시 확대·심화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복지국가의 성격이 자본주의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제도적, 규범적 토대를 제공한 측면이 강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복지국가는 복지문제를 소득분배 영역에 집중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과 결합시켰다. 20세기 자본주의는 포드주의적 복지제도에 기대어 성장지상주의라는 자본주의의 가치를 성취하는 데 일조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이상호, 2001). 사회복지는 그 토대를 자본주의이건 사회주의이건 그 어떤 것에 근거를 하고 있든, 그 원형인 두 체제가 산업주의에 기반을 두고 생산성을 증진시켜서 인간복지를 확충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한면희, 2007).

III. 생태복지를 향하여

1. 생태복지와 국가복지의 패러다임 비교

복지국가 및 국가복지는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생산성을 증진시켜서 인간복지를 확충하자는 성장지상주의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는 인간의 진정한 생활복지(生活福祉)의 확

립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영호, 2004; 한면희, 2007). 현시대는 신자유주의가 주류인 사회로써, 전지구적 차원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초래하는 생태위기와 공동체해체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그로 인한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 선진 자본주의사회의 분별없는 성장과 소비주의, 그리고 그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일부분 일조한 국가중심의 서구적 복지 패러다임은 급진적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Mishra, 1999).

따라서 향후 전개될 바람직한 사회상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계단일시장, 세계단일문화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으로부터, 지역의 경제와 문화,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지역사회를 토대로 한 생태공동체 사회'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곧 복지패러다임이 국가복지(state welfare)에서 생태복지(ecowelfare)로 변화되는 것이다. 생태복지의 패러다임은 국가복지의 사후처리적, 성장지상주의적, 인류중심적 접근을 탈피하여, 전체성(holism),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다양성(diversity), 균형(equilibrium)의 원칙(Life, 2002) 하에 자연세계의 지탱가능성을 고려하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이는 곧 사전예방적, 성숙지상주의적, 생태중심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태복지를 위한 실천 전략

본 연구에서는 생태복지 실천전략으로서, 대안경제(對案經濟)적 접근을 중심으로, 생태공동체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것을 제시해 보았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대조세제(地代租稅制)는 토지가치환수제의 하나로서 지대세(地代稅)를 모든 세금에 우선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이다. 이는 생태공동체 형성의 기본틀이 된다, 지대조세제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고, 복지재원 마련에 있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토대가 된다. 이는 곧 생태주의적 지역사회복지를 펼치는 물리적 환경을 어떻게 규정짓느냐를 결정하는 기초전략이 된다.

둘째, 지역통화(地域通貨)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유형 또는 무형의 교환매개체를 통하여 지역주민끼리 상품과 노동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제도의 형식을 말한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다. 또한 화폐경제 중심의 차가운 경제를 대체하면서, 상호연대와 의존, 자발성을 증진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내에서의 거래를 활성화 시킨다는 점에서 생산물의 무분별한 이동을 막으므로 생태적이다.

셋째, 적정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은 생태주의의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과학적 도구로서, 자원고갈이나 자연파괴를 동반하지 않으며, 기술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하고 이해 가능한 것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선 여전히 정교한 기술을 말한다. 이는 자급자족적인 소규모 지역경제를 지켜내며 활성화시키고, 생태계의 자원을 분별력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완전고용과 여가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세가지 전략이 통합적으로 수행되어, 생태주의의 가치 중 하나인 통(統)전(全)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 생태주의적 가치와 이념으로 현대 복지국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복지국가라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성장 지상주의적 가치를 견지한 체, 경제성장의 호순환을 창출하기 위

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었다. 즉,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한 생태위기와 공동체해체라는 두가지 주요 문제가 발생시킨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복지국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후적, 임시방편적인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국가복지와 생태복지의 패러다임을 비교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재구조화를 추구하는 생태복지가 후기 산업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으며, 이러한 접근 전략으로서 지대조세제, 지역통화, 적정기술을 소개하고, 이들 각각이 사회복지적, 생태주의적 대안으로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현재 전세계는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가 대세(大勢)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각 나라(지역)의 생태나 문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서구의 것을 무비판적으로 차용(借用)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현대의 복지국가는 마르크스주의나 생태주의적 관점에 의해 자본주의의 물신(物神)숭배적 가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진정한 복지사회(Welfare Society)를 만들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서 생태공동체가 주체(主體)가 되는 생태복지를 제안하고자 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천적 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 정체성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며 미시적인 사회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제시가 요구되며, 지역적 수준의 실천에 집중하고 있는 생태복지가 세계화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류혜정 역, 2005. 『지역사회개발』. Ife, Jim, 2002. *Community Development*. 인간과복지.
- 박승희, 2005. 『한국사회복지정책론-아름다운세상가꾸기.』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박시중·이혁구 역, 2002.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위기-지구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Mishra, R. 1999.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송호근·홍경준, 2006. 『복지국가의 태동.』 나남출판.
- 이상호, 2001. 『미국식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일자리 나누기와 생태친화적 복지제도-고르쓰와 리피에츠의 견해를 중심으로.” 당대
- 이상호 역, 2002. 『작은 것이 아름답다』. Schumacher, E.F., 1973. *Small is beautiful*. 범우사.
- 최종혁, 2004. “한국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 『한국사회복지』 제9집. 강남대 한국사회복지연구소.
- 한동우, 2007. “지속가능성: 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평.” KBS강태원복지재단 전문가칼럼.
<http://www.kbsktw.com>
- 한면희, 2007. “환경정의 관점에서 복지사회 과제와 전망.” 『사회적·환경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복지사회 패러다임』 환경정의포럼 자료집. 환경정의연구소.
- 홍기빈 역, 2002. 『전 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경제인가 외』. Polanyi, Karl., 1945. "Universal Capitalism or Regional Planning". 책세상.
- Offe, C. 1984. *Contradiction of the Welfare State*. London : Hutchinson.